킬러문항 설 자리 없다…수학 등 26개 공개

'킬러문항' 26개 공개…'EBS 교재 연계' 문항도 포함

교육부, 국어 7개·수학 9개·영어 6개·과탐 4개 제시

교육부가 최근 3년 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지난 1일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킬러문항' 26개를 선별해 공개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활용해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 정의했다. 단, 교육과정 위반 여부, 정답률 등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킬러 문항으로 제시된 일부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시험 당일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이라 밝힌 것으로 나타나 혼선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2021학년도 수능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4차례의 시험에서 소위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15~25일 열흘 간 검증한 결과다. 영역별로는 수학이 9개로 가장 많고, 국어 7개, 영어 6개 순이다.

아울러 검증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각 시험당 1개씩 과학탐구 4개 문항을 선별해 함께 제시했다.

시험별로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2개 문항을 제시했고, 나머지 2022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수능,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각 8개씩을 선정했다.

다만,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아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33번, 2022학년도 수능 국어 13번의 경우 평가원이 출제 당일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EBS 교재를 활용한 문항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오전 사전 설명회에서 "특정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문항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어의 경우, 고교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 용어를 사용해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을 꼽았다. 아울러 선택지 의미, 구조가 복잡해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문항 역시 킬러문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주제로 낸 공통과목(독서) 14번을 예시로 들었다.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써서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선택지로 추상적인 문장을 제시해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클라이버의 법칙'을 지문으로 제시한 2023학년도 수능 15, 17번도 배경지식과 수학적 이해 능력이 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킬러문항으로 꼽았다.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킬러 문항으로 꼽았다.

수학은 여러 수학적 개념을 결합,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나 고차원적 해결법을 요구한 문제를 선정했다.

/뉴시스

민주당 광주, 입당원서 제출 위법 사례 제재키로

당원자격심사위, 입당원서 대리제출 지침 일부 완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입당원서 대리제출 지침 일부는 완화하되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례는 철저히 제재키로 했다.

광주시당은 26일 제5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를 열고 입당원서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례에 대한 제재와 대리 제출 지침 일부 완화 등을 의결했다.

당자위는 "대리제출된 입당원서는 처리지침 교육과 보안서약서 작성을 완료한 입력 요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입력·수정내용은 전산에 모두 기록된다"며 "당헌·당규의 규정과 지침에 입각한 공정한 입당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자위는 이날 입당원서 대리제출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한 입당원서 제출과 주소변경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자들에게는 당헌·당규에 따라 주소지 증빙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자위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강화했던 1인당 하루 100매 이하 입당원서 제출 지침을 100매당 1부의 접수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당자위는 "중앙당 지침 시행 후 하루 500매의 입당원서 제출을 위해 대리 제출자 5명이 당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우려돼 지침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입당원서 대리제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당은 입당원서 제출과 처리 과정에서 공정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위·탈법 사례는 엄단해 시민께 인정받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퇴임 앞둔 전현희 "권력 위한 정부 돼 국민 우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항상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집권여당은 '국민의 힘'을 자임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돼가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은 국민이 하고 계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퇴임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와 방통위 감사와 관련해 "우연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본인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사퇴와 압박 탄압이 집중됐던 당사자들로서 (한 전 위원장과) 동병상련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 중립기관을 한두 사람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망가뜨리고 무너뜨렸다"며 "감사원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얻은 것은 빈손 감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 행위와 법률 위반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이정미 대표 단식돌입 특별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잠수함 여군 탄다…부사관 선발·장교 교육

해군, 최초 잠수함에 여군 배치…장교 2명·부사관 7명 등

내년부터는 해군 잠수함에도 여군들이 승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해군이 여군을 잠수함에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군은 최근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승선할 여군 부사관 7명 선발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승조원 선발에서는 총 22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최종 7명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선발하게 됐다.

당초 해군은 잠수함 여군 부사관의 경우 4명 가량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원자가 예상보다 몰리면서 선발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3000톤급 잠수함에 승선할 여성 장교 2명도 선발했다. 선발된 여성 장교 2명은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급은 '대위'다. 이들 중 한명은 미 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된 여성 장교·부사관들은 해군잠수함사령부 소속 제909교육훈련전대에 입교해 내년 초까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잠수함에 승선하는 시기는 2024년이 될 전망이다.

해군은 기존 1200·1800톤급 보다 큰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면서 처음으로 여군 선발을 계획했다. 도산안창호함의 경우 승조원 거주 구역을 격실로 나누는 등 여군 탑승에 대비하기도 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달 선발이 끝난 여군 장교는 이미 교육을 받고 있다"며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교육 완료 이후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나눠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 "특권 포기, 소속 의원들 총의 모을 것"

"의원 개개인의 권한…의원들 동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존중하고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원회의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낙연 당분간 '강연 정치' 정부 비판 나설듯

李, 귀국길서 "모든 국정 재정립하길 바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해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했다.

당분간은 민주당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이재명 체제' 흔들기로 해석돼 당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가를 돌며 강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책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해 온 외교 정책과 남북 관계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친다. 대외 관계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며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시스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 현역 의원 발기인 없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발기인 참여가 없어 창당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한국의희망은 기존 정치와 다른 세 가지 정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정치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양 의원의 신기술 전문가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인다.

尹, 29일께 일부 장차관·방통위원장 인사…국정원장은 유임될듯

전현희 오늘 임기 종료·한상혁 면직 가처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과 일부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대거 차관 인사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고삐를 죄는 것이다.

권익위원장 임기가 이달 27일로 끝나는 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면직처분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인사는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교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됐다.

우선 전현희 권익위원장 후임으로는 김홍일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미 내정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달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29일께 후임을 지명할 경우 현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일인 7월 30일 이후 임명이 가능해져 인사청문회는 한번만 치르면 된다.

장차관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장관은 통일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이명박정부 당시 통일비서관을 지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물수능(쉬운 수능)'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는 장관 교체보다는 차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면 배치가 예상되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거론된다. 행안부의 경우 현재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이번 차관 교체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차관인사는 10명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차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는 비서관들 중 총선을 희망하는 인사가 꽤 있어 이들을 배제하고 5~6명선에서 차관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추가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인사파동 논란의 책임을 물어 국정원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김규현 원장은 유임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게 대통령실 생각이다.

호매만평

이태헌